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사공복희* · 문 승 주**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기관의 정부간행물 입수업무 분석
II. 정부간행물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자료입수
1. 정부간행물의 정의	2. 정부간행물의 입수업무분석
2. 정부간행물의 유형	3. 정부간행물의 입수상의 문제점
3. 정부간행물에 관한 선행연구	4.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방안
III.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체계	V. 결 론
1. 정부간행물의 발행	Abstract
2.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I. 서 론

정부가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알리거나 혹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또는 국가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은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그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리비트(E. P. Leavitt)가 “오늘날 많은 학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들은 정부간행물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¹⁾고 말할 정도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활동을 위해 정부간행물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보를 검색, 수집, 분석하여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 그들의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연구기관 정보자료실은 연구자들이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원으로 가치가 높은 정부간행물을 적극적으로 입수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체계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연구기관에서 정부간행물을 효과적으로 입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것은 유가 정부간행물의 경우 일반 상업적인 유통경로와는 달리 그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고, 무가 정부간행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보급정책이나 합리적인 배포기준보다는 배포담당자의 주관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연구기관에서도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정부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간행물을 입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입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원으로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발행실태를 조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이 정부간행물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간행물의 입수시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자료를 통한 문헌적 연구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

1) E. P. Leavitt, "Government Publications in the University," *Library Journal*, Vol. 86, No. 9 (1961), p. 1741.

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와 제반법규의 검토를 통해서 정부간행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명한 다음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발행현황과 유통체계를 통계자료나 각종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가능한 한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정부산하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분석'²⁾에서 파악하고 있는 4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협의회'³⁾에 가입되어 있는 12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의 수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정부간행물의 입수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입수상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간행물의 합리적인 유통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정부간행물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정부간행물의 정의

허논(P. Hernon)과 맥클러(C. R. McClure)는 "국가정보의 범위는 넓고 정의 또한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형태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⁴⁾고 하였듯이, 범위가 넓고 형태도 다양한 관계로 정부간행물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의 규정이나 정부를 보는 시각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에서는 "정부(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간행

2) 이수철, 정부산하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분석(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4), pp. 64-65.

3)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칙, 1993년 2월 10일 제정, 1995년 2월 17일 개정.

4) P. Hernon and C. R. McClure, "GPO' Depository Library Programs: Building for the Future," Library Journal, Vol. 113 (1988), p. 52.

물”⁵⁾로 규정하고 있어 배포대상이 되는 간행물로 정부간행물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⁶⁾로 규정하여 납본대상이 되는 자료로 정부간행물을 명시하는 등 우리나라 여러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정부간행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전인 ‘United States Code’의 경우에는 “정부의 비용으로 혹은 법률의 요구에 의해서 개개의 문서로 간행되는 정보자료”⁷⁾라고 정부간행물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헌상에 나타난 정부간행물의 정의로는 ‘미국도서관협회 용어사전’에는 “법률상 조직된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권한에 의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보통 Government documents, Public documents, Documents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⁸⁾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행기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각 나라나 기관에 따라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고, 사실 그 내용과 형식도 다양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정부간행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이 기록매체에 관계없이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미하며,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5)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4년 12월 23일 개정.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5069호(교육법), 1995년 12월 29일 개정.

7) 44 U. S. Code: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1901 Defini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8) ALA,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p. 106.

2. 정부간행물의 유형

취급하는 주제가 다양하고 형태기준도 다양하므로 정부간행물의 유형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기준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일반자료와 마찬가지로 1차자료와 2차자료로 구분하거나, 혹은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또는 도서와 비도서자료 등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발행기관, 주제, 언어, 간기, 배포방법(유가, 무가)이나 간행물의 외형 등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형구분은 주로 내용이나 형식 또는 간행목적 등에 따라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자료 등 새로운 정보기록매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보기록매체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법규상에는 행정간행물을 다음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⁹⁾

- | | |
|----------------|-------------|
| ① 백서 | ⑥ 조사·연구보고서 |
| ② 법령·제도·예규집 | ⑦ 편람, 업무지침서 |
| ③ 통계집·연보 등 통계류 | ⑧ 논문, 과학기술서 |
| ④ 홍보·안내물 | ⑨ 사료·연혁집 |
| ⑤ 일반교양·잡지류 | ⑩ 연설문 등 기타 |

3. 정부간행물에 관한 선행연구

정부간행물에 대한 국내연구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고 그 생산규모도 커짐에 따

9)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91조 4항 별표26(종별 및 간별의 구분), 총리령 제570호, 1996년 5월 28일 개정.

라 정부간행물에 대한 연구도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간행물에 관한 연구에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배포나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나 혹은 입수방안에 관한 연구 등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주로 발행이나 정리, 서지통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관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몇편의 논문이나 학술지에서 부분적으로 정부간행물 배포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다루기는 했지만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었을 뿐 정부간행물의 전반적인 배포나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의 빈약한 연구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정부간행물에 관한 연구가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학술잡지¹⁰⁾도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잡지를 통해 혹은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정부간행물의 배포나 유통체계에 관한 외국의 몇몇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첼(M. L. Mitchell)은 미국 주정부간행물의 입수와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50개의 주정부문서국(State Documents Authorities)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그 분석을 통해 주기탁도서관의 역할이나 효용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서들은 주정부간행물의 배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갖추어지거나 혹은 주정부간행물이 통합되어 관리되기 전까지는 기탁도서관에 주정부간행물을 배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를 주정부문서국에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¹¹⁾

포스(S. M. Foss)는 미국 정부인쇄국(Government Printing Office:

10) 예를 들면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Greenwich: JAI Press, 1984-),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Oxford: Pergamon Press, 1974-).

11) M. L. Mitchell, *State Depository Programs: The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ation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1989.

GPO)의 정부간행물 가격결정이나 판매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11가지 측면을 다룬 연구에서 현재의 정부간행물의 가격결정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판매량을 늘려 정부간행물의 판매가격을 낮추어야 하고 일반 상업서점을 통해서도 정부간행물이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외에도 미국 정부인쇄국의 정부간행물 배포경향과 이러한 배포경향이 정부간행물을 관리하는 기탁도서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위스(S. C. Weiss)의 연구¹³⁾나 전자형태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의 배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허논(P. HERNON)과 맥클러(C. R. McClure)의 연구¹⁴⁾ 등이 있다.

Ⅲ. 정부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체계

1. 정부간행물의 발행

최근들어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 1>¹⁵⁾에서 일반도서와 정부간행물의 발행추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반도서는 1994년에 29,564종이 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27,407종이 발

12) S. M. Foss, "Improving the Dissemination of United States Government Information: The Report of Public Printer's Sales Publication Pricing Panel,"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18, No. 5 (1991), pp. 435-450.

13) S. C. Weiss, "A Graphic Look at GPO Depository Distribution: 1975-1993,"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Vol. 22, No. 4 (1995), pp. 337-344.

14) P. HERNON and C. R. McClure, "Dissemination of U. S. Government Information in CD-ROMs and Other Forms," *CD-ROM Professional*, Vol. 5, No. 2 (1992), pp. 67-71.

15) 정부간행물제작소, 정부간행물목록 (서울: 정부간행물제작소, 1994-1996),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4-1996)에서 재구성.

행되어 무려 -7.2%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간행물은 1994년에 4,645종이 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4,950종이 발행되어 6.5%가 증가해 일반도서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간행물은 지속적으로 그 발행종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출판물중에서 정부간행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에 12.5%, 1994년에 13.6%, 1995년에 15.3%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간행물의 발행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일반도서와 정부간행물의 발행추이

구분 \ 년도	1993년	1994년	1995년
전체출판물	30,047종	34,209종	32,357종
일반도서 (증가율)	26,304종 -	29,564종 (12.3%)	27,407종 (-7.2%)
정부간행물 (증가율)	3,743종 -	4,645종 (24.0%)	4,950종 (6.5%)
전체출판물/정부 간행물의 비율	12.5%	13.6%	15.3%

주: 일반도서의 경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부 납본에 의한 집계이다. 하지만 정부간행물의 경우는 문화체육부 납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서의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였다.

2.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1) 정부간행물의 유통환경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는 고립된 상황에서 고정적인 형태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외부유통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되고 새로이 조직되어가는 유통적인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에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환경은 크게 내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리고 법적,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내부적 환경

정부간행물은 특성상 유상배포와 무상배포로 양분되어 있어 이에 따라 유통경로가 다르게 나타난다. 유상배포는 주로 발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판매되거나 혹은 위탁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경로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상배포의 경우도 각 발행기관이 발행부수내에서 배포 대상자를 관례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배포처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발행기관의 행정편의주의나 우월주의 및 전시행정 등도 정부간행물의 유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간행물의 거래제도나 유통상의 관습, 행정편의주의, 발행기관들간의 우월주의와 전시행정 등 내부적인 요인은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약적인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외부적 환경

출판유통산업은 전자출판물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출판매체의 진화와 출판물 수명주기의 단축, 다종목 소량 다빈도 거래의 확대 등 출판유통자체의 변화도 크지만, 소비자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 등 소비환경의 변화,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의 외적 환경변화가 구조적인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⁶⁾ 비록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는 유가/무가로 나누어짐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다른 유통경로가 전개되어 일반간행물의 유통체계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간행물 유통과정도 출판유통산업의 한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외부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16) 이두영, 출판물유통(서울: 청한, 1993), p. 101.

3) 법적, 제도적 환경

①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실시여부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유통환경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시점¹⁷⁾이다. 그후 정부는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려는 취지하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¹⁸⁾’을 발령하였고, 1997년 4월 8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 시행령을 통해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전 국가기관은 물론 특수법인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의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정부간행물을 포함한 행정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②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제도

정부 각 부처가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간행물의 종합조정 방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설치목적과 조직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은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규정¹⁹⁾’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 발행의 적정성을 기한다는 당초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발행된 정부간행물중에서 심의를 받은 정부간행물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그 활동이 다소 형식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간행물 발행단계에서부터

17) 1991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의결한 후 28일에 청주시에 이송했으나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8)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1994년 3월 21일 발령.

19)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제2조(구성), 제4조(기능),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4년 12월 23일 개정.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정심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정보가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정부간행물 판매보급규정

정부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절약 및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제정된 ‘정부간행물 판매보급규정²⁰⁾에 의하면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해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의 설치, 판매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의 가격체계는 시장기능을 무시한 채 인쇄비내에서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아 일반도서와 경쟁력을 갖춘 정보상품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정부간행물제작소

정부간행물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간행물제작소를 공보처의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직무²¹⁾를 명시하여 정부간행물의 인쇄와 발행의 분산체제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간행물의 유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조차 발행을 의뢰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간행물제작소가 담당하는 기능은 정부간행물을 전담하여 관리하기보다는 그 기능의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고, 배포 등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CD-ROM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엄

20) 정부간행물 판매보급규정, 총리령 제151호, 1975년 6월 21일 개정.

21)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대통령령 제15041호, 1996년 6월 29일 개정.

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촉진기본법’²²⁾을 제정하여 행정부문의 정보화를 통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예산을 공공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크게 증가시켜 오고 있다.²³⁾

그러나 각각의 정부부처가 전자정보의 생산이나 배포를 위해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투자나 이용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간행물도 다양한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켜 주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도서와는 달리 정부간행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생산되는 재화로 국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 일부 정부간행물만이 효율적으로 배포한다는 취지하에 실비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는 일반 출판물의 유통체계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간행물이 유통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납본제도에 의한 방법, 무상배포에 의한 방법, 유상배포에 의한 방법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납본제도에 의한 정부간행물 유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경우도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1항, ‘국회도서관법’ 제7조 1항, 그리고 ‘사무관리규정’ 제82조 등 법규정에 따라 각 발행기관은

2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법률 제4969호, 1995년 8월 4일 제정.

23)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1996, p. 86. 정보화사업예산의 경우 '95년 예산이 1,962억원인 데 비해 '96년에는 2,72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9.1%가 증가하였다.

정부간행물의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일정기간안에 발행자료의 일부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및 지역대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납본제도는 근거법률이 통일되어 있지 못해 복잡하고 납본대상기관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그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납본에 관한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간행물과는 달리 정부간행물의 납본실적은 납본을 직접 행하는 해당기관 담당자의 납본에 대한 인식부족, 의무사항이나 강제성이 부족한 법·제도상의 문제 및 복잡한 납본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발행되는 정부간행물 전체가 납본기관에 납본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 무상배포에 의한 정부간행물 유통

일반적으로 무가 정부간행물은 각 발행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먼저 발행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한 배포리스트에 따라 정부기관, 공공단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과 같은 단체와 관련분야 전문가나 혹은 사회적 인사를 포함한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배포를 한 후에 나머지 소수를 각 기관의 전시대에 비치하거나 혹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 전시용으로 비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유통경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일반 이용자는 각 발행기관에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도움을 받거나 혹은 도서관이나 판매센터에 소수 비치되어 있는 것을 열람·복사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발행기관에서 배포처를 선정할 때 주로 기존의 배포리스트, 행정관행 그리고 배포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배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간행물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포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된다.

그리고 정부간행물의 배부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발행된 정부간행물의 종류에 따라 “정부기관·지방공공단체·정부관리기업체

기타 필요한 기관²⁴⁾과 같이 배부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배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배포가 이루어질 여지가 많다.

3) 유상배포에 의한 정부간행물 유통

현재 유가 정부간행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기구는 발행기관이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밖에 없지만, 각 발행기관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나 일반소비자와는 각각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과정이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복잡하다.

또한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센터를 통한 보급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각 발행기관이 판매센터에 위탁판매를 하거나 혹은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는 사무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간행물의 판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 정부간행물중에서 유가 정부간행물의 종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판매센터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간행물 판매보급규정’ 제6조에 “발행기관의 장은 정부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당해 정부간행물 5부를 판매센터에 비치·전시하게 하기 위하여 판매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발행기관은 해당간행물을 판매센터에 제대로 송부하지 않기 때문에 각 판매센터에서는 近刊간행물을 제대로 전시하지 못해 새로운 수요창출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고, 실령 판매가 되고 있다라도 서울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유가 정부간행물의 종류와 부수가 극히 빈약해 정부간행물의 중앙집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24) 법령집 등 편찬 및 간행규정 제4조, 대통령령 제11355호(법제처 직제), 1984년 2월 16일 개정.

IV. 연구기관의 정부간행물 입수업무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자료입수

본 설문조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서 수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정부간행물을 실제로 어떻게 입수하는지를 알아 본 후, 이 입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간행물 유통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정부출연 44개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출연 12개 연구기관으로 총 56개 연구기관의 정보자료실에서 근무하는 수서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996년 9월 13일에 배포하여 10월 12일까지 회수하였는데, 이 중에서 43개 기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전체 76.8%의 회수율을 보였는데, 설문내용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1부를 제외하고 4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을 연구주제와 출연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그 회수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응답기관 현황

구 분		연구기관		
		배포기관수	응답기관수	회수율
연구주제	인문사회계	32	25	78.1
	과학기술계	24	18	75.0
출연기관	정부부처	44	32	72.7
	지방자치단체	12	11	91.2
계		56(개)	43(개)	76.8(%)

2. 정부간행물의 입수업무분석

(1) 설문대상기관의 일반현황

설문조사대상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장서중에서 정부간행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관별로 0.5%이하에서부터 최고 50%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구성비율은 14.5%였다(〈표 3〉 참조).

연구주제분야별로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중에서 정부간행물이 차지하는 평균구성비율이 7.5%인 반면,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평균구성비율은 19.3%이다. 출연기관별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균구성비율이 12.4%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의 평균구성비율은 19.4%이다.

전체 자료구입중에서 정부간행물을 구입하는 비율을 알아 본 결과도 기관별로 0.5%이하에서부터 최고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지만 평균 구입비율은 10.2%이다(〈표 3〉 참조).

연구주제분야별로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전체 자료구입비중에서 정부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한 평균예산비율은 14.2%인 반면에,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평균예산비율은 5.3%에 불과하다. 출연기관별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균예산 비율은 7.6%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의 평균예산비율은 무려 21.8%나 된다.

〈표 3〉 정부간행물의 평균구성비율 및 평균구입비율

구 분		전체 소장자료중에서 정부간행물의 구성비율	전체 자료구입비중에서 정부간행물의 구입비율
연구주제	인문사회계	19.3	14.2
	과학기술계	7.5	5.3
출연기관	정부부처	12.4	7.6
	지방자치단체	19.4	21.8
평 균		14.5(%)	10.2(%)

(2) 정부간행물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연구기관에서 수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정보원으로서 정부간행물의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정보로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88.1%에 달하였다. 특히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사서들은 전체가 정부간행물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사서들도 70.6%가 정부간행물은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정부간행물에 대한 인식도(사서)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매우 중요하다	17(68.0)	4(23.5)	21(50.0)
중요하다	8(32.0)	8(47.1)	16(38.1)
그저 그렇다	0(0)	4(23.5)	4(9.5)
중요하지 않다	0(0)	1(5.9)	1(2.4)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0(0)	0(0)	0(0)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또한 실제 이용자들은 정부간행물의 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76.2%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연구자들도 대체로 정부간행물의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정부간행물에 대한 인식도(연구자)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매우 중요하다	12(48.0)	2(11.8)	14(33.3)
중요하다	11(44.0)	7(41.2)	18(42.9)
그저 그렇다	2(8.0)	5(29.4)	7(16.7)
중요하지 않다	0(0)	3(17.6)	3(7.1)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0(0)	0(0)	0(0)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이렇듯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6>에서 보듯이 66.7%가 정부간행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자료와 같은 빈도로 이용하는 기관까지를 포함하면 88.1%에 달하여 정부간행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이용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중에서 정부간행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수가 29.4%여서 인문사회계 연구기관보다 정부간행물의 이용도가 뒤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 정부간행물의 이용도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매우 많이 이용한다	12(48.0)	1(5.9)	13(31.0)
많이 이용한다	11(44.0)	4(23.5)	15(35.7)
다른 자료와 같은 빈도로 이용한다	2(8.0)	7(41.2)	9(21.4)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0(0)	5(29.4)	5(11.9)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0(0)	0(0)	0(0)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3) 정부간행물의 입수에 관한 분석

1) 정부간행물 입수에 대한 일반현황

① 정부간행물 입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보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그 이용도 많은 정부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입수하기 위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정부간행물을 위한 제도적 기구나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담사서를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중에서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12개 기관(48.0%)이었고, 정부간행물에 관한 성문화된 정책이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기관은 3개 기관(12.0%)이었다. 그리고 정부간행물만을 전담하는 사서가 있는 기관은 5개 기관(20.0%)이었다.

반면에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경우는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13개 기관(76.5%)으로 인문사회계 연구기관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에 관한 성문화된 정책이나 규칙이 마련 되어 있다거나 정부간행물만을 전담하는 사서가 있는 기관은 각각 3개 기관(17.6%)과 2개 기관(11.8%)에 불과하여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거의 같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정부간행물의 입수를 위한 기구, 정책, 전담사서

구 분	인 문 사 회 계			과 학 기 술 계		
	도서선정 위원회	입수정책	전담사서	도서선정 위원회	입수정책	전담사서
있 다	12(48.0)	3(12.0)	5(20.0)	13(76.5)	3(17.6)	2(11.8)
없 다	13(52.0)	22(88.0)	20(80.0)	4(23.5)	14(82.4)	15(88.2)
계	25개(100%)	25개(100%)	25개(100%)	17개(100%)	17개(100%)	17개(100%)

② 유가/무가 정부간행물 입수

입수하고 있는 전체 정부간행물중에서 유가/무가의 비율에 관한 분석결과 는 <표 8>과 같다. 전체 응답기관중에서 구입을 통해 입수하는 유가 정부간행물이 10%에 못미치는 기관이 37.5%였고, 응답한 기관의 80%가 유가 정부간행물의 구성비율이 30%에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간행물의 정보원으로서의 인식과 이용이 낮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인문사회계 연구기관보다는 정부간행물을 유가로 구입하는 비율이 낮다.

<표 8> 유가 정부간행물의 비율

구 분	연구주체		출연기관		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10%이하	7(28.0)	8(53.3)	14(48.3)	1(9.1)	15(37.5)
11-20%	8(32.0)	3(20.0)	9(31.0)	2(18.2)	11(27.5)
21-30%	4(16.0)	2(13.3)	3(10.3)	3(27.2)	6(15.0)
31-40%	3(12.0)	1(6.7)	2(6.9)	2(18.2)	4(10.0)
41-50%	2(8.0)	1(6.7)	1(3.5)	2(18.2)	3(7.5)
51-60%	1(4.0)	0(0)	0(0)	1(9.1)	1(2.5)
70%이상	0(0)	0(0)	0(0)	0(0)	0(0)
계	25개(100%)	15개(100%)	29개(100%)	11개(100%)	40개(100%)

이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정부간행물을 입수할 때 구입을 통한 유가 정부간행물의 입수보다는 기증이나 교환에 의한 무가 정부간행물을 입수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매를 통한 정부간행물의 배포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간행물이 무가로 배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가 정부간행물의 합리적인 배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③ 입수를 위한 정부간행물 선정

사서들이 정부간행물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중에서 45.2%가 정부간행물의 입수를 위하여 각종 서지도구를 참조하고 있으며, 26.2%는 직접 발행기관에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4.8%)(<표 9> 참조).

〈표 9〉 정부간행물의 선정방법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발간기관에 직접 문의한다	6(24.0)	5(29.4)	11(26.2)
서지도구를 참조한다	10(40.0)	9(52.9)	19(45.2)
유통기구의 안내를 받는다	1(4.0)	1(5.9)	2(4.8)
이용자의 구입 신청을 받는다	7(28.0)	1(5.9)	8(19.0)
기 타	1(4.0)	1(5.9)	2(4.8)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하지만 입수할 정부간행물을 선정할 때 많이 참조하는 서지도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10>에서 보듯이 45.3%가 정부간행물에 관한 각종 서지도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0〉 서지도구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매우 만족한다	0(0)	0(0)	0(0)
만족한다	5(20.0)	2(11.8)	7(16.7)
그저 그렇다	8(32.0)	8(47.0)	16(38.1)
불만족스럽다	11(44.0)	7(41.2)	18(42.9)
매우 불만족스럽다	1(4.0)	0(0)	1(2.4)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이처럼 정부간행물의 선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지도구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52.6%는 발행자료에 대한 속보성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망라성의 부족(15.8%)이나 수록내용의 빈약(15.8%)을 각각 들고 있다. 이외에도 서지도구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10.5%)(<표 11> 참조).

<표 11> 서지도구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속보성이 부족하다	4(36.4)	6(75.0)	10(52.6)
망라성이 부족하다	3(27.3)	0(0)	3(15.8)
숫적으로 빈약하다	1(9.1)	1(12.5)	2(10.5)
수록내용이 빈약하다	3(27.3)	0(0)	3(15.8)
기 타	0(0)	1(12.5)	1(5.3)
계	11개(100%)	8(100%)	19개(100%)

정부간행물의 관리가 통합되지 못하고 발행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행처와 발행종수가 워낙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납본기관에 제대로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서지도구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간행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다양하고 정확한 서지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④ 정부간행물 입수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부간행물의 입수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정부간행물에 관한 각종 서지도구가 부족하여 발행자료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42.9%), 발행기관이 정부간행물의 제공을 거절하여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26.2%나 되었다. 이외에도 기밀문서 등 공개가 제한된 자료가 많거나(14.3%), 발행자료의 수량이 부족하여 정부간행물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4.3%)(<표 12> 참조).

〈표 12〉 정부간행물의 입수시 어려운 점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간행정보의 파악이 어렵다	7(28.0)	11(64.7)	18(42.9)
발행기관이 간행물제공을 거절한다	10(40.0)	1(5.9)	11(26.2)
기밀문서 등 제한된 자료가 많다	3(12.0)	3(17.6)	6(14.3)
발간자료가 부족하다	5(20.0)	1(5.9)	6(14.3)
기 타	0(0)	1(5.9)	1(2.4)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이러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 40.5%가 정부간행물 전달기구를 설립하여 출판에서 배포에 이르기까지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신속하게 서지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26.2%나 되어 서지도구의 중요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26.2%는 모든 정부간행물을 유가화하여 판매시스템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극히 일부는 기탁도서관제도를 실시하자고 하였다(2.4%)(<표 13> 참조).

〈표 13〉 정부간행물의 입수시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방안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신속하게 서지도구를 제공해 준다	5(20.0)	6(35.3)	11(26.2)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을 설립한다	0(0)	1(5.9)	1(2.4)
모든 정부간행물을 유가화한다	7(28.0)	4(23.5)	11(26.2)
정부간행물 전달기구를 설립한다	1(4.0)	6(35.3)	7(16.7)
기 타	2(8.0)	0(0)	2(4.8)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2) 유가 정부간행물의 입수

① 유가 정부간행물의 구입경로

유가 정부간행물은 연구주체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입하고 있었는데, 그 구입경로는 <표 14>에서 보듯이 69.2%가 정부간행물의 판매보급을 위해 운영하는 판매센터를 통해 정부간행물을 구입하고 있었고, 28.2%가 발행기관에서 직접 구입한다고 하여 유가 정부간행물의 거래는 판매센터

와 발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유가 정부간행물의 구입경로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발행기관에서 직접 구입한다	6(26.1)	5(31.3)	11(28.2)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서 구입한다	16(69.6)	11(68.8)	27(69.2)
판매업자를 통해 복제본을 구입한다	1(4.3)	0(0)	1(2.6)
복사하여 비치한다	0(0)	0(0)	0(0)
기 타	0(0)	0(0)	0(0)
계	23개(100%)	16개(100%)	39개(100%)

유가 정부간행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를 통해 정부간행물을 구입할 때 56.8%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정부간행물 유가판매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표 15〉 참조).

〈표 15〉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자료구입시 만족도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매우 만족한다	0(0)	0(0)	0(0)
만족스러운 편이다	4(17.4)	3(21.4)	7(18.9)
그저 그렇다	5(21.8)	4(28.6)	9(24.3)
불만족스럽다	13(56.5)	6(42.9)	19(51.4)
매우 불만족스럽다	1(4.3)	1(7.1)	2(5.4)
계	23개(100%)	14개(100%)	37개(100%)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판매센터에서 취급하는 자료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42.9%), 최신자료가 부족하다는 것(33.3%)이 주된 이유여서 한마디로 비치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정부간행물 판매가격이 비싸고(9.5%), 판매센터가 숫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4.8%)(〈표 16〉 참조). 사실 각 발행기관은 사무상의 번잡을 이유로 위탁판매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간행물 전달기구에서 합리적으로 유가/무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후에 모든 유가 정부간행물은 발행 즉시 판매센터를 통해 유통되도록 해야 판매센터가 활성화될 것이다.

〈표 16〉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자료구입시 불만족스러운 이유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자료가 다양하지 않다	4(30.8)	5(62.5)	9(42.9)
최신 자료가 부족하다	5(38.5)	2(25.0)	7(33.3)
판매장소의 수가 부족하다	1(7.7)	0(0)	1(4.8)
판매가격이 비싸다	2(15.4)	0(0)	2(9.5)
기 타	1(7.7)	1(12.5)	2(9.5)
계	13개(100%)	8개(100%)	21개(100%)

②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확대

정부간행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는 〈표 17〉에서 보듯이 56.1%가 정부간행물의 유통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였고, 유가 정부간행물의 홍보를 강화하여 판매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경우가 31.7%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가 정부간행물의 유통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간행물 전담기구 소속으로 민간유통전담기구를 두어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나 홍보를 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표 17〉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확대방안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유가 정부간행물의 홍보확대	5(20.8)	8(47.1)	13(31.7)
판매센터의 설치를 확대	0(0)	1(11.8)	2(4.9)
정부간행물의 유통전담기구를 설치	17(70.8)	6(35.3)	23(56.1)
유가 정부간행물의 시장경쟁력확보	1(4.2)	0(0)	1(2.4)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	1(4.2)	1(5.9)	2(4.9)
기 타	0(0)	0(0)	0(0)
계	24개(100%)	17개(100%)	41개(100%)

3) 무가 정부간행물의 입수

① 정부간행물 무상배포의 만족여부

무가 정부간행물의 입수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주제에 관계없이 전 연구기관

은 무상으로 배포되고 있는 정부간행물을 입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무상배포방법에 대해 61.9%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로 정부간행물 무상배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참조).

<표 18> 정부간행물의 무상배포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매우 만족한다	0(0)	1(5.9)	1(2.4)
만족스러운 편이다	6(24.0)	3(17.6)	9(21.4)
그저 그렇다	2(8.0)	4(23.6)	6(14.3)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4(56.0)	9(52.9)	23(54.8)
매우 불만족스럽다	3(12.0)	0(0)	3(7.1)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정부간행물의 무상배포가 만족스럽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발행자료가 부족하여 배포대상자가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고(65.4%), 발행자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한 경우는 19.2%였다. 이외에도 배포대상자의 선정이 비합리적이고(7.7%), 배포경로가 다양하지 않다고 하였다(7.7%)(<표 19> 참조).

<표 19> 무가 정부간행물의 배포상의 문제점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배포대상자의 선정이 비합리적이다	1(5.9)	1(11.1)	2(7.7)
자료의 홍보가 부족하다	0(0)	5(55.6)	5(19.2)
배포대상자가 항상 제한되어 있다	15(88.2)	2(22.2)	17(65.4)
배포경로가 다양하지 않다	1(5.9)	1(11.1)	(7.7)
기 타	0(0)	0(0)	0(0)
계	17개(100%)	9개(100%)	26개(100%)

② 무가 정부간행물의 배포방안

무가 정부간행물의 효과적인 배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거의 반에 달하는 기관에서 정부간행물의 유통을 전담하는 새로운 종합유통기구를 설립하자고 하였고(42.9%), 발행된 무가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를 확

대 하자는 경우가 28.6%였다(<표 20> 참조).

(표 20) 무가 정부간행물의 바람직한 배포방안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무가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 확대	4(16.0)	8(47.1)	12(28.6)
배포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5(20.0)	3(17.6)	8(19.0)
정부간행물의 유통전담기구 설립	12(48.0)	6(35.3)	18(42.9)
발행부수의 증가	4(16.0)	0(0)	4(9.5)
기 타	0(0)	0(0)	0(0)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통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유가/무가 정부간행물 유통을 전담하도록 하고, 홍보의 확대를 통해 발행자료를 적극 알림으로써 정부간행물의 유통을 촉진시키자는 방안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무가 정부간행물의 경우는 발행기관이나 유통기구에서 배포하기보다는 정부간행물 전담기구에서 유통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③ 무가 정부간행물의 유가화

현재 무상배포되고 있는 정부간행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간행물을 전부 유가화할 때 구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표 21>에서 보듯이 거의 대다수가 전부 혹은 필요한 정부간행물은 구입하겠다고 하여 정부간행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95.2%).

(표 21) 무가 정부간행물의 유가화시 구입여부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전부 입수하겠다.	3(12.0)	0(0)	3(7.1)
필요한 것만 입수하겠다	22(88.0)	15(88.2)	37(88.1)
입수 않겠다	0(0)	2(11.8)	2(4.8)
기 타	0(0)	0(0)	0(0)
계	25개(100%)	17개(100%)	42개(100%)

④ 불필요한 무가 정부간행물의 처리방법

이용되지 않는 정부간행물이 무상으로 입수되었을 때 그 자료의 처리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이 즉시 폐기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전신후에 폐기해 버린다고 하여(73.8%),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된 귀중한 자료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대로 배포되지 못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따라서 귀중한 정보원인 정부간행물이 폐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와 함께 합리적인 배포를 통해 정부간행물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표 22〉 불필요한 정부간행물의 입수시 처리방법

구 분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계
즉시 폐기한다	3(12.0)	7(41.2)	10(23.8)
일정기간 전신후에 폐기한다	12(48.0)	9(52.9)	21(50.0)
정리 후에 보관한다	9(36.0)	1(5.9)	10(23.8)
타 기관에 기증 또는 교환한다	1(4.0)	0(0)	1(2.4)
기 타	0(0)	0(0)	0(0)
계	25(100)	17개(100%)	42개(100%)

3. 정부간행물 입수상의 문제점

연구기관의 수서담당사서들은 일반도서와는 달리 정부간행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의 입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정부간행물의 입수과정상의 제반 문제점이나 정부간행물 유통체계상 불합리한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을 위한 각종 서지도구가 숫적,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해 발간자료의 파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서지도구를 발행하여 제공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유가 정부간행물은 각 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함으로써 유통경로가 분산되어 구입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넷째,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판매하는 정부간행물은 종수도 제한되어 있고 최신자료도 부족하여 판매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무가 정부간행물은 합리적인 배포기준도 없이 주로 배포담당자의 주관이나 행정관행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무가 정부간행물을 새로 입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섯째,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된 정부간행물이 비합리적인 유통체계로 배포가 잘못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현재 정부간행물의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고 각 발행기관별로 분산관리됨으로써 나타나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정부간행물의 납본 등을 포함하여 정부간행물 유통체계에 많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정부간행물 관련법규들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오히려 정부간행물의 자율적인 발행이나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자화된 정부간행물의 생산이나 배포에 대한 마인드가 확산되어 있지 않고 있고 기술적 조정이 없이 각 정부기관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간행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기

나 혹은 기존의 유사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법규정을 강화해서 정부간행물이 납본기관에 의무적으로 배포되도록 하고, 정부간행물의 기탁도서관제도를 도입·운영한다. 특히 정부간행물의 납본이나 기탁도서관의 관리는 물론 정부간행물의 유가/무가의 결정도 정부간행물 전담기구가 맡도록 한다.

셋째, 가능한 한 무가 정부간행물을 유가로 전환하여 판매채널을 통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가화가 곤란한 무가 정부간행물은 정부간행물 전담기구에서 발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포한다.

넷째, 유가 정부간행물은 정부간행물 전담기구 산하에 설치된 민간유통기구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하되,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가 정부간행물의 편집, 인쇄나 가격결정도 민간유통기구에서 맡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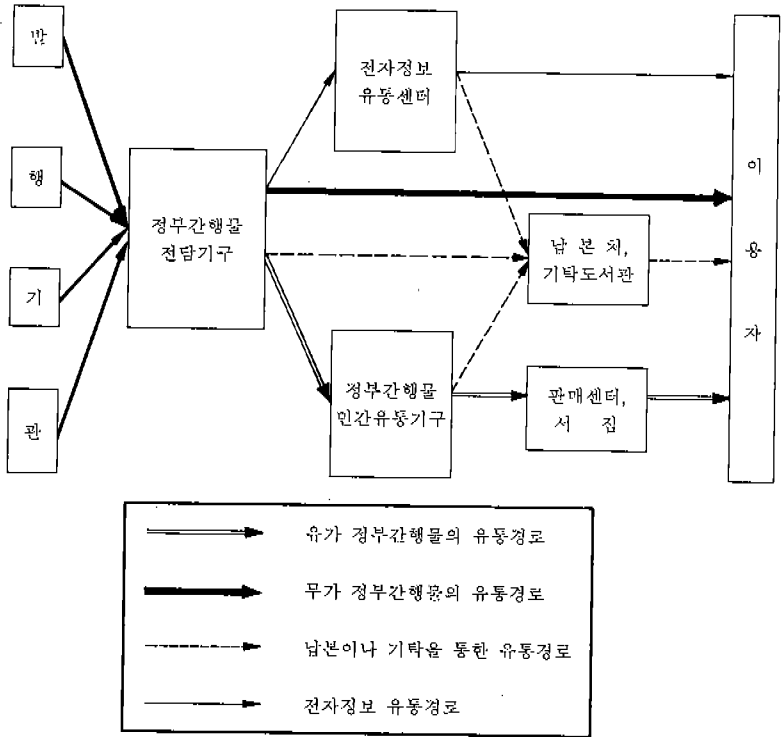
다섯째, 유가 정부간행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판매센터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수요가 많은 특정간행물에 대해서는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판매센터의 관리는 민간유통기구가 맡도록 한다.

여섯째, 실정에 맞지 않는 정부간행물에 관한 법규정이나 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개선하여 정부간행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일곱째, TV나 라디오 등을 이용한 정부간행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정부간행물의 수요를 진작시키도록 한다.

여덟째, 새로운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각종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정부간행물의 전자생산 및 전자배포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보유통센터를 설치·활용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정부간행물 종합유통체제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부간행물의 종합유통체계

V. 결 론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알리기 위한 국가홍보행정에 대한 중요성의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에 따라 국가와 국민 간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정부간행물의 생산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인 정부간행물의 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연구기관에서는 정부간행물을 적극적으로 입수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점들로 인해 유가/무가 정부간행물을 효과적으로 입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의 입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간행물의 입수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나타난 정부간행물의 입수나 유통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간행물을 위한 각종 서지도구가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둘째, TV나 신문 등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한 정부간행물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유가 정부간행물의 경우 발행기관별로 유통경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넷째,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는 유가 정부간행물의 종수도 부족하고 최신자료도 부족하여 판매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무가 정부간행물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배포담당자의 주관이나 행정관행에 따라 배포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이 무가 정부간행물을 입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여섯째,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정부간행물이 제대로 배포되지 못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정부간행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간행물의 발행이나 배포 등 정부간행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발행되는 정부간행물이 납본기관에 의무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납본에 관한 법규정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로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설치된 정부간행물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유가/무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무가 정부간행물은 가능한 한 유가화로 전환하여 판매채널을 통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가화가 곤란한 것은 정부간행물 전담기구에서 발행한 후에 합리적인 배포기준에 따라 배포하도록 한다.

넷째, 유가 정부간행물은 전담기구 산하에 설치된 민간유통기구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특히 유가 정부간행물은 일반간행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유통기구에서 편집이나 인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한 후 정부간행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최신자료의 보급을 강화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정부간행물은 일반서점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규정 등 정부간행물에 관한 제도나 규정을 수정하거나 혹은 폐지한다.

일곱째, TV나 라디오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부간행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담기구에서 정부간행물에 관한 종합적인 서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정부간행물의 수요를 진작시키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CD-ROM이나 통신망을 이용한 정부간행물의 전자생산 및 전자배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통합을 위해 전자정보유통센터 설치·활용한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 정부간행물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공보처, 1995.
- 김경섭.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행정DB 공동활용," 국가기간전산 망저널, Vol. 3, No. 2 (1996), pp. 39-55.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94-1996. 서울: 한국출판문화협회, 1994-1996.
- 배영환. "한국 정부간행물 발간 실태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서관, Vol. 49, No. 1 (1994), pp. 22-44.
-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안인자. 한국 정부간행물에 대한 분류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3.
- 이두영. 출판물유통. 서울: 청한, 1993.
- 이수철. 정부산하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4.
- 정부간행물제작소. 정부간행물목록 1994-1996. 서울: 정부간행물제작소, 1994-1996.
- 정중훈.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부 간행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최영옥.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한국출판연구소. 도서유통체계 및 관리개선연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1990.
- 홍정화. 정부간행물 배포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 Foss, Stuart M. "Improving the Dissemination of United States Government Information: The Report of Public Printer's Sales Publication Pricing Panel,"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18, No. 5 (1991), pp. 435-450.
- Fraser, Emily J. and Fisher, William H. "Use of Federal Government Documents by Science and Engineering Faculty," *Government*

- Publications Review*, Vol. 14 (1987), pp. 33-44.
- Gey, Frederick C. "Information Distribution Practices of Federal Statistical Agencies: The Census Bureau Exampl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0, No. 3 (1993), pp. 319-330.
- Harrod, Leonard M. *Harrod's Librarians' Glossary*. 8th ed., Aldershot: Gower, 1995.
- Hernon, Peter and McClure, Charles R.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Issues, Trends, and Strategies*. 2nd ed., Norwood, New Jersey: Albex, 1988.
- Hernon, Peter and McClure, Charles R. "Dissemination of U. S. Government Information in CD-ROMs and Other Forms," *CD-ROM Professional*, Vol. 5, No. 2 (1992), pp. 67-71.
- Hernon, Peter and McClure, Charles R. "GPO's Depository Library Programs: Building for the Future," *Library Journal*, Vol. 113, No. 6 (1988), pp. 52-56.
- Hohns, William A. "GPO/2001: Vision for a New Millennium: Brief Observations on, and Reprint of, the Strategic Planning Vision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19 (1992), pp. 333-383.
- Jacobs, Jim. "U. S. Government Computer Bulletin Boards: A Modest Proposal for Reform,"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17 (1990), pp. 393-396.
- Kinder, Rovin. *Government Documents and Reference Services*. New York: The Haworth Press, 1991.
- Lane, Margaret T. *Selecting and Organizing State Government Publications*. Chicago: ALA, 1987.
- Mitchell, Michael L. *State Depository Programs: The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ation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1989.
- Purcell, Gary R. "Reference Use of State Government in Public Libraries,"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10 (1983), pp. 173-188.
- Purcell, Gray R. "U. S. Government Publications Collection Development for Non-Libraries,"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Vol. 8 (1981),

pp. 31-45.

Weiss, Stephen C. "A Graphic Look at GPO Depository Distribution : 1975-1993,"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Vol. 22, No. 4 (1995), pp. 337-34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in Korea

Sakong, Bok Hee* · Moon, Seoung Ju**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tch hold of the problem occurring in the process in which librarians have obtained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o show the method that can construct the rational distribution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For this study, total 56 librarians who work for 44 institutes sponsored by central government and 12 institutes sponsored by local government were chosen as the objects of research and questionnaire survey to know how to obtain government publications.

How to construct the rational distribution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is as follows.

(1) The exclusive organization to manage overall service for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newly or previous similar organization should be reorganized.

(2) As reinforcing the law concerning deposit copy,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distributed obligatorily to all of the deposi-

*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ory agency, and the depository library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managed newly.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deposit copy and the depository library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undertaken by the exclusive agency of government publications.

(3) Free-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converted to pay-government publications as much as possible so that everyone can purchase government publications easily. And free-government publications which are difficult to convert to pay-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rational standard by the exclusive agency of government publications.

(4) Pay-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sold by private distribution organization under exclusive agency of government publications. Also printing, editing and pricing of pay-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done by private distribution organization to compete with general books.

(5) In order to promote the sales of pay-government publications, the sales centers of government publications must be established even in city and county. Also special government publications which have much demand should be sold even in general book stores.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the sales centers should be undertaken by private distribution organization.

(6) It is necessary to abolish or improve unreasonable regulations or system related to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o make legislative, institutional devices for government publications.

(7) The public relations for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nforced much through TV or radio etc. , and the various biblio-

graphic tools of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for the sake of much utiliz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8) By using new technology like CD-ROMs or communication networks, electron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push ahead positively. And electronic information distribution center to support it should be established by government agency.